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11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19.

발 의 자 : 최수진 · 임이자 · 김소희
김예지 · 구자근 · 김선교
박준태 · 박충권 · 강승규
신성범 · 김위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국회법」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견제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그러나 국회 다수 야당이 지나치게 탄핵을 남발할 경우 정치적 악용, 행정 공백, 사법부 부담, 국정 마비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탄핵심판의 경우 길게는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 운영에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등 해외에서와 같이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단 현행 헌법 제65조제3항에서 “탄핵소추의결 시 직무가 정지된다”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, 「국회법」과 「헌법재판소법」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일정 부분 심사한 후 직무 정지

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를 판단하도록 함(안 제134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최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「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11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4조제2항 중 “권한 행사는 정지되며,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”를 “권한 행사의 정지는 헌법재판소의 별도 결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,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직무 정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4조(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,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.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34조(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권한 행사의 정지는 헌법재판소의 별도 결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,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.</u></p> <p>③ <u>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직무 정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</u></p>